

#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원숙경\*\* · 윤영태\*\*\*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역사적, 규범적, 분석적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시 민(民)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항 공론장은 반(半)봉건·반(反)외세적 성격을 띤 하부 공론장의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즉, 조선 후기의 대항 공론장은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 반(半)봉건·반(反)외세적 성향이 가진 생동적인 공론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은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항일운동의 발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민중운동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론장, 대항 공론장, 조선 후기, 근대 초기

## 1. 문제 제기

198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개방이 시작되었다. 한미FTA 등을 비롯한 외부자본의 유입과 국내 기업의 독점화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기층민들은 위기의 시대이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자본의 위협은 새롭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낳았다. 기존의 ‘민주화’라는 대제에서 벗어나, 생활접근적이고 생계와 관련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속속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주도세력은 기존의 지식인 계층이 아니라, 생활 속의 경험을 토대로 한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었다(조희연, 2011, 100쪽). 하지만 이러한 생활중심의 사회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근대 문물이 처음 들어오는 그 시기에도 이러한 사회운동이 형성되었다. 당시 공론장은 봉건적 공론장<sup>1)</sup>과 근대적 성향이 있는 다양한 공론장의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는 조선이 서구와 같은 시민혁명이나 근대적 사회변동의 과정을 겪지 않았던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이다. 즉 당시 부르주아 계층<sup>2)</sup>들은 계몽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건과 결합하여 봉건적 공론장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대신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던 민(民)<sup>3)</sup>이 주축이 된 대항 공론장이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입니다. 본 논문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weonsk@naver.com, 주저자)

\*\*\*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tytoon@deu.ac.kr, 교신저자)

- 1) 봉건적 공론장은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과시의 장이었다. 또한 공론장의 공적 지배권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의 앞에서’ 구현되는 장이었다. 즉 이 공론장은 그들의 권력을 고시(告示)하는 장이며, 구현하는 장이었다(北郷裕實, 2006, 113쪽). 조선 초기 공론장은 주로 상소나 간쟁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태조실록』에 “공론(公論)이란 천하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태조실록』, 태조 1년(1392년), 11월 9일)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국이념은 민본사상이지만, 실 정치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 초기 공론장은 서구와 유사하게 민 앞에서 구현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 2) 당시 부르주아 계층은 새로운 농업기술로 인해 부를 축적한 요호부민과 상업체계의 변화로 부를 이룬 도시상인들이다. 처음에는 이들도 민(民)과 함께 개혁을 꿈꾸기도 했지만, 곧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시 봉건세력과 결탁, 오히려 민(民)들에게 대한 착취와 폐약을 일삼은 계층들이 많았다.
- 3) 조선 후기 민(民)은 시민개념에서 확장된 의미이다. 조선사회에서 시민을 처음 사용한 흔적은 『태조실록』에서

활성화되고, 이를 지탱하게 하는 근대적 사상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역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론장의 유형들은 서구의 시민사회와 공론장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 때문에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였다. 특히 민중운동의 자율성을 근대와의 대립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직된 시각 때문에, 민중의 자율성은 근대적인 융합·경합할 가능성조차 배제되었다(배항섭, 2008, 370~372쪽). 또한,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시민사회형성의 경우, 제3세계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시민혁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민(民)의 저항의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배항섭, 2009, 209쪽).

최근 들어 근대이행기의 사료들이 재조명되고, 그에 따른 근대이행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맹아론 역시 서구식의 접근에서,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sup>4)</sup>에서 형성되는 부르주아계층과 기본 봉건세력이 결탁한 봉건적 공론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민(民)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항 공론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에 시민사회형성이 늦어진 이유와 그럼에도 현대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형성된 민중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

발견할 수 있다(태조 3년, 1394년 6월 1일). 이때 시민은 양반계급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민(民)은 글자 그대로 통치자(統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다 포함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자와 구별하는 피치자를 가리키고 있다. 전자의 의미로 쓰이는 민(民)은 인(人)과 다르지 않다. 물론 조선 시대의 민(民)은 후자로 사용되었다. 민(民)의 이 같은 이중적 의미는 인간이란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그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정치적 운명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학의 민본사상은 민을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천(天)과 결부시킴으로써 피치자에 불과한 민에게 피치자 이상의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민을 통치자인 군주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최진덕, 2000, 133쪽). 민본주의에서 나타난 민은 단순히 정치적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의 궁극 목적이다. 그 때문에 국가도 왕도 궁극적으로 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민은 자율적 인격과 덕성을 타고난 존재로서,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장승구, 2000, 214~218쪽). 그러나 현실에서의 민(民)들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없었고, 세(稅)와 역(役)의 의무만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 외에도 조선 시대 양반관료제적인 통치구조 속에 민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민(民)은 양역(良役)을 부담하는 중심 계층이면서도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95, 106쪽). 이러한 민의 위치가 조선 후기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4) 역사-구조적 연구에서 시대 구분이 필요한 것은, 특정 시대의 한 사회가 가진 특수한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다음 시대를 열어가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추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운상, 1993, 147쪽).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는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념이 잘 나타나고, 대항 공론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근대화가 이행되는 시기’를 선택했다. 한국 근대화의 기점을 보는 견해는 다양하다(주중환, 1988).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17세기 이후 기존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상품-화폐경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는 관점(류원동, 1989; 이영훈, 1989; 최단옥, 1983; 주중환, 1988; 서울사회과학연구소, 2010 등)이다. 다음으로는 개항(1876) 이후를 근대의 맹아기로 보는 관점(김윤희, 2009; 김성국·서관도, 1986; 최용호·엄창욱, 1995; 장시원, 1989 등)이다. 이들은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 파악하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에 자본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보며, 근대주권개념이 이때 생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도면희(1993) 등은 갑오경장을 그 기점으로 삼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들 주장 중 한국근대사의 맹아(萌芽)를 전통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17세기 전후로 선정하였다. 한국 근대사에서 이 시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체계가 서서히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계층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근대적 인민사상이 싹트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당시 부르주아계층에 비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강했던 민(民)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에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영·정조대에 민(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린 반면, 이 시기에 오면, 민(民)이 봉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폐쇄되고, 상대적으로 민(民) 스스로 공론(公論)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식민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민(民)의 사회적 저항의식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 또한 민(民) 중심의 대항 공론장의 연구가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민중운동의 한 형태로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민들이 생활권 보호와 생존을 위해 행한 사회운동을 통해, 민(民)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사상을 조명할 수 있고, 새로운 근대사상이 민의 의식 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 근대 초기 전형화 되어 있는 공론장의 논의를 극복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공론장의 유형을 유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기존문헌 검토 및 연구문제

대항 공론장의 ‘대항(counter)’는 그 의미 자체가 ‘반대의’ 혹은 ‘저항적인’으로, 주류 공론장에 저항함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대안(alternative)’와 확연히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 부분<sup>5)</sup>이다(北郷裕實, 2006, 120쪽). 대항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후기자본주의의 등장과 신사회 운동을 계기로 넉트와 크루게(Negt & Kluge, 1993)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프레이저(Fraser, 1992), 아노이즈(Arnowitz, 2000), 폭스(Fuchs, 2010) 등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들은 대항 공론장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장(Fuchs, 2010, p. 176)인 동시에 평등논리에 내재한 사회적 불평등을 끌어내는 실천의 장이자 항쟁의 장(Fraser, 1992)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론장에서 행해지는 주요 주제는 일상생활의 정치화, 사회적 불평등의 발현, 사회변혁 및 체제변화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민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운동을 통해 실현하였다(원숙경·윤영태, 2012). 따라서 대항 공론장은 주류 공론장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당한 계층이 그 담론을 끌어내고 재생산하여 실천하는 운동 공론장이다(木原滋哉, 2007, 181쪽, 191~192쪽).

한편, 한국에서 대항 공론장 의미는 대안적 미디어 혹은 대항 공론장, 대안 공론장, 대안언론 등의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인철·이동근(2005)는 대안언론에 공론장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논의를 펼치고 있고, 김은규(2005)는 주류 언론과 대안언론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대안 미디어는 주류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박춘서(2000)는 대안언론이 대항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대안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강상현(2000), 김은규(2005; 2006), 박선희(2001; 2002), 박춘서(1999; 2000; 2003; 2005), 유용민·김성해·심영섭(2011), 윤영태(2005; 2009), 임동욱(2005), 장우영(2005), 장호순(2001), 홍성구(2001), 한선·이오현(2008) 등이 있다. 이들은 디지털미디어의 가능성과 공동체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이 대항 공론장을 곧 대안언론에 의해 구현되는 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대항 공론장의 연구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 연구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 때문에 근대의 공론장에 대한 접근은 주로 『독립신문』과 그에 관련된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김용직(2006), 신용하(1975), 이동수

5) 대안의 의미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 혹은 대체’를 의미하므로, 대항 공론장과 대안 공론장은 이념적 규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저항적 요소’를 함의한 대항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2006), 이황직(2009), 장명학(2004; 2007), 최형익(2004)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한편 신용하(1975)는 「독립신문」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동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동학운동이 신흥사회세력을 집결시키고, 동학군의 주장은 근대적 사상과 지식의 형성차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民)의 사회운동이 기반이 되어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고 보고 있다(신용하, 1975, 314쪽).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당시 민(民)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일어난 배경요인으로 당시의 사회운동을 설명하지만,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은 「독립신문」이라는 관점은 유사하다. 그래서 당시 민(民)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에 대한 공론장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대 이행기의 민중사 관련 연구는 많이 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사회적 변동을 연계한 공론장 연구는 빈약하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박영학(1990), 김광욱(1993), 정일권(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당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상호작용과정, 비제도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부이다. 즉, 사회변화와 연관하여, 역동적이고 다변적인 구조를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민(民)중심의 형성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전개된 조선 후기의 민(民) 중심의 사회변동에 대한 고찰은 사회적 구조에 치중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저항적 요소와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이 민(民)으로 하여금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기제와 이들을 규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당시 대항공론장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 1992)가 제시한 방법론을 도입해 역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으로 나누어 탐구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사적 차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는 규범적 차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는 분석적 차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특히 구조적 차원에서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트리아에플필로스(Triadafilopoulos, 1999)가 공론장의 구조파악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구성요소, 즉 주체·주제·공간·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참조로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한 것은 누가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매개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는가?, 그 매개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따라 공론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투쟁, 접근과 참여를 둘러싼 투쟁, 재현을 둘러싼 투쟁 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Silverston, 1999/2009, pp. 3~9). 이러한 구조화 과정은 역사 속에 묻혀있는 민(民)들의 언로(言路), 즉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구조를 오늘날 시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화기술적인 방법과 역사-구조적 방법을 채택하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1차 자료는 고문서 국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방미디어’의 「Korea A2Z」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과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동학 관련 고문서를 종합해 논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sup>6)</sup>를 참조하였다. 2차 자료는 공론장과 조선 후기

6) 1894년 전후로 당시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의 사회운동과 이에 대응했던 보수지배층의 진압활동 등을 상세하게 서술된 고문서를 총 종합하여 번역한 책으로,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사회적 변화, 당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논문과 책을 중심으로 행할 것이다.

### 3. 역사적 차원에서 대항 공론장의 특성

17세기 이후 조선은 사회적으로 농업경제력의 발전, 민(民)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활성화, 교통의 발전, 민의 의식고양 및 교육의 기회확대, 신분제도의 붕괴 등, 정치적으로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매관매직 등 국가기강문란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식민화과정을 겪으면서, 이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 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증폭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선 봉건사회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면, 봉건사회 내부에서 서서히 성장해 온 자본주의적 체제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동요되면서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봉건사회의 해체과정은 전역에서 진행되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기본적인 동력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이다.<sup>7)</sup> 이양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이 조직화하고, 이 때문에 생성된 결사체인 공동 노동조직이 ‘두레’이다. 두레는 조직에서 지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마을을 단위로 하는 자작·소작 농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두레는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촌주민이 대동적(大同的)으로 노동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힘든 노동과정을 즐거운 행위로 전화시키는 결속의 매개였다(김민남, 1990). 동시에 공동노동과정에서 형성되는 엄격한 위계와 규율, 확실한 역할분담체제, 고도의 조직성을 가진 조직이었다(최우영, 2006, 269쪽). 즉, 애초에 사족 배제의 순수 농민조직인 두레는 계급모순에 민감하였으며, 당연히 이에 대처하는 투쟁의 능력 역시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두레는 민을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를 조직화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봉건제에 대항하는 사회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향회의 역할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향회는 사족 층들이 상호결속을 다지고 향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부세부납 방식이 공동납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면리나 동에 분담되던 부세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民)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다. 이처럼 향회가 부세행정에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그 구성에서도 대소민제회(大小民齊會)의 형식으로 반상(班常)의 구분 없이 참여하는 향회로 변화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7, 5쪽). 향촌사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봉건모순은 심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호 부민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민(民)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이 와중에 토지집중의

7) 18세기 유럽의 공론장 출현은 봉건사회의 해체와 자본주의체제 생성이라는 측면은 조선 후기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그 생성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유럽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먼저 사회의 점진적인 분화, 국민국가로서의 국가권력의 집중과 세속화 등의 경향과 더불어 공적인 규범과 사적인 도덕 사이의 분리로 나타났다. 특히 부르주아지는 자기계발의 기획에 몰두하게 되고, 이는 문학과 예술의 소비를 통해 나타났다. 이것이 토대로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인쇄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공론장 형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이상길, 2006, 284~285쪽). 그러나 근대초기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체제는 형성되나, 서구와 달리 농업 중심적 자본주의가 생성되었고, 그 기반은 미약하였다. 또한 이때 생성된 부르주아계층은 서구와 달리 봉건세력과 결탁, 봉건체제 안에 그대로 안주하고자 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낀 기층민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대항 공론장을 통해 저항하고자 했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특히, 정조 2년에 ‘사직 윤면동(尹冕東)이 올린 상소문’<sup>8)</sup>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집중은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계속된 개간을 통해서 가능하였지만, 대부분 토지를 매득하거나 수탈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층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빈농층은 극심한 궁핍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들은 봉건사회해체기 사회 모순을 그대로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사회변혁에 대한 희구와 염원을 가진 층이었다. 이러한 염원은 반(半)봉건 대항 공론장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서술분과, 1989, 30쪽).

한편, 종래의 상품경제가 주로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하는 과정이 국가적 상품화폐 경제였다면, 18세기 이후에는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쌀, 농기구, 면화, 면포 등이 주요한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이것들은 농촌 주위의 장사에서 교환되었다(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서술분과, 1989, 15~16쪽). 따라서 상인들은 상업 행위를 통해 상품생산에 투자하여 상업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는 중세적 상업체제에서 근대적 상업체제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잉여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로 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확대와 상품거래증진은 피지배층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소통이 없던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피지배층들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체의 이념 또는 지배층의 가치관에 파묻혀 있던 조선 시대 피지배층에 사회와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항 공론장의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정일권, 2010, 87~88쪽).

또한, 시장의 발달은 육상·해상교통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전국의 모든 지역은 도로 교통의 발달로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이후 장시(場市)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장시권의 확대와 통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전하여 전국이 자유로이 해상으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해로유통권이 형성되었다(고동환, 1996, 11~12쪽). 이러한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었다.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한 이는 보부상이었다. 보부상들이 전하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소식은 시장을 찾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지역을 돌며 정보와 소식을 전하여, 여론형성을 이끌었다(엄묘섭, 1987).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기저에는 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한글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의 교육경험은 조선 전기부터 이른바 교화를 위해 설치된 관학에 의해 일부 이루어졌다. 18세기 후반에 평민층이 대거 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교육의 대중화가 본격화되었다. 평민출신의 훈장이 등장하면서 사족들도 이를 권장했다. 사족들 가운데 평민들을 위해 서재를 짓고 직접 교육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곡식을 거두어 계를 조직하고 훈장을 모셔서 교육하기도 하였다.

8) “전에 권홍(權弘)이 이리 같은 탐욕을 부리자, 온 세상이 모두 이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백만의 돈을 팔로(八路)에 두루 흩어 한 구역이라도 점유할 만한 토지나 세넬 만한 전장(田疇)은 문득 반드시 값을 올려서 사들였기 때문에 값이 수배로 뛰어올라 가세가 미약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애당초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투어 온 나라의 전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토지는 가세가 치성한 집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 흉년이 든 해를 만나게 되면 향곡(鄉曲)의 부호(富豪)의 무리가 시기를 틈타 이익을 쟁기 위해 헐값으로 강제로 사들였기 때문에 민간에 남아 있던 약간의 전지마저 또한 모두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겸병(兼并)하여 이익을 독점하려는 폐해인데, 그 해가 평민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정조실록』, 정조 2년(1778년), 7월 20일.

서당은 19세기에 들어 더욱 확산하였다(배향섭, 2010, 119쪽). 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한글이 대중화되었다. 또한, 널리 보급된 한글 덕분에, 누구나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비판적인 내용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익명으로 작성, 벽이나 문에 몰래 써 붙이거나 장대에 걸어 놓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정일권, 2010, 88쪽). 즉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확산은 권력의 분산을 촉진해 지식의 세습을 통해 신분질서를 유지해 온 전통사회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의 변화는 민(民)들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으로 봉건체제는 중앙과 지방에서 지배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세기에는 세도정치가 전개됨으로써 세력균형에 기초한 양반관료 지배체제의 기반이 무너져 권력기반이 현저히 약화되었다(정진상, 1994, 69쪽) 순조에서 철종까지 계속된 세도정치는 봉건적 인정(仁政)<sup>9)</sup>의 이념구현이라는 왕권의 도덕적 기반마저도 붕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세도정권의 집권자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국가통치의 원칙이나 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다(김용근, 2000, 181쪽).<sup>10)</sup> 고종 1년에 ‘이용하가 뇌물 질과 탐오죄를 범한 심이택의 죄상을 고하는 보고’<sup>11)</sup>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고질화하여, 마치 행정관계처럼 자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품화폐 경제발전은 도시 소비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사치욕구를 자극하여 양반 지배층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마침내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는 가혹한 농민수탈로 채울 수 없을 만큼 국가재정고갈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자연히 권력에 의한 농민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이는 19세기 만성적 삼정수탈의 한 계기가 되었다(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 분과, 1989, 20쪽). 이 문제는 후에 민을 대한 공론장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동인(動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해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 후기의 부세제도는 18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전정·군정·환정이라는 삼정체제로 확립되었다. 삼정체제하에서는 부세제도의 운영도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부패관리들은 전정, 군정, 환곡 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민(民)을 수탈하였다. 이에 민(民)의 생활은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에 빠졌다. 이와 함께 공공구조인 국가재정도 고갈됨으로써 국가 기강은 흔들렸다. 특히 삼정문란으로 인한 고통 중에, 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환곡이다(황보희, 2007, 240쪽). 고종 1년에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이 올린 상소’<sup>12)</sup>에서 드러나

9) 인정(仁政)은 민본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본사상은 국가나 왕보다 민을 우선시 하며, 만약 국가와 왕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민의(民意)를 거역하면 혁명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는 공론(公論)에 따라 민을 위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장승구, 2000, 218~220쪽).

10) 국가기강 문란, 신분제 붕괴 등에 관한 부담은 당시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하는 부르주아계층에 간 것이 아니라, 힘없고 권력에 접근이 힘든 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것은 서구식의 근대적 공론장 형성이 일어날 수 없는 원인이 된 동시에 봉건의 잔재를 조선 말기까지 유지한 요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던 민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한 공론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11) “전 부윤(府尹) 심이택(沈履澤)은 그저 뇌물질만 일삼으면서 순전히 재물을 거주어 들이기에 힘썼습니다. 크고 작은 지시에는 뇌물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크고 작은 고을일로 병들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탐학한 짓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한 고을이 그만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중략>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세 섬을 개방하고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국경에서의 신용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사상(私商)에게서 뇌물을 받고 몰래 국경을 넘겨주고 포상(包蔘)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여 강제로 받아먹었습니다.” 『고종 실록』, 고종1년(1864년) 3월3일

12) “한 도(道) 내에서 삼정(三政)이 폐단으로 되었는데 삼정 가운데도 환정(還政)이 가장 심합니다. 재작년에 3분의

듯이, 환곡의 폐단은 한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유망민(流亡民)을 만들어 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에 관한 부담은 비단 농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업에 종사하거나 광업에 종사하는 민(民)에게도 조세로 말미암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sup>13)</sup> 이처럼, 삼정문란은 민을 곤궁한 상태로 몰아갔다. 삼정문란으로 인해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산속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어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들 유랑민 가운데 일부는 도시 전역으로 흘러들어 가 고용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특히 상업의 발달로 대규모 노동력 수요가 있던 서울은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sup>14)</sup> 도시빈민의 증가와 함께 도시의 생활을 어렵게 한 것은 관리들의 침학이었다. 관리 가운데도 특히 하급 관리들의 침학(侵虐)<sup>15)</sup>이 심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각 아문의 이서배들이 관부의 권위에 빌려 하층민을 침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 중에서도 통치기강 문란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매관매직이다. 매관매직의 성행은 지방관에 의한 수탈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서배들의 작폐가 격심해지고, 관직을 사는 데 든 비용을 농민들로부터 착출(擄出)하려던 지방관은 이서배와 공모하여 사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상품화폐발달은 이러한 수탈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러한 수탈은 신분질서를 와해시키고, 이후 민들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배항섭, 1992, 263~264쪽). 이 와중에 외세에 의한 침탈과 억압은 민(民)들로 하여금 자주적 사회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은 조선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이나 중국과 무역하던 외국상선들이 조선 해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 분과, 1989, 61~62쪽). 고종 3년(1866년)에는 특히 많이 나타났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총 97건이 이양선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양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당시 제국주의 침략에 위기를 느낀 대원군 정권은 통상수교거부정책을 강화하였다(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 분과, 1989, 62쪽). 그러나 외세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적극 행하였다.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의 체결(1871년), 강화도 사건 도발(1875년)과 강화도조약 강요(1876년)는 그 구체적 표현이다. 조선은 강화도조약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 무관세 무역, 세 항구의 개항 및 거류지 설치, 영사재판권, 일본화폐의 통용권, 그리고 조약재정의

2를 탕감 받은 이후에 그 당시 보존하고 있는 실지 수량을 계산해보니 임술년(壬戌年) 여름과 가을의 각종 곡식이 쌀로 도합 2만 6,683석(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것과 탕감한 것을 정리하기가 매우 용이하지 않아 지난해 8월에 와서야 전 감사(監司) 유장환(兪章煥)이 겨우 비변사(備邊司)에 보고를 내었습니다. <중략> 문서상에서 비록 숫자를 이리저리 옮겨놓아 조절하기를 하였으나 그것들은 사실 다 장부에만 올라있는 곡식이거나 유망민(流亡民)이 내어야 할 몫으로써 결국 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해에 장리로 늘어나는 이자만 받자고 해도 턱없는 징수로 될까봐 걱정인데 다른 고율로 보낼 것이야 더욱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고종실록」, 고종 1년(1864년) 3월 11일.

- 13) 「고종실록」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바닷가에서 받는 세금이 갯가의 포구(浦口)들이 지탱하기 어렵고, 금을 캐는 것이 거의 보편화된 결과, 온갖 폐단이 불어나 고통스러운 기색과 걱정하는 소리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종실록」, 고종 27년(1890년), 10월 20일.
- 14) 도시의 발달과 농촌사회의 붕괴는 농민들의 도시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 부분은 서구의 도시형성과 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서구와 다른 유형의 도시형성과 계급분화가 심화한다. 예를 들어, 당시 부르주아계층의 역할이 미미했고, 권력구조의 부패, 즉 불합리한 조세 제도와 매관매직 때문에 관리체제가 붕괴하고, 서구와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였다. 그 때문에 근대로의 이행과정은 새로운 논리와 체제로의 전개보다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주요 논제였다. 이는 곧 민들을 중심으로 대항 공론장을 형성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 15) 당시 하급관리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은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참기 어려운 처욕을 주는 일이 빈번하였다.



협의 등을 거치면서 중요한 주권들을 점점 상실하였다(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분과, 1989, 75~77쪽).

이러한 외세의 침입에 대한 민(民)들의 반외세 투쟁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1875년 8월 일제의 침략적 운양호 사건 때부터 우리 민의 반침략 투쟁 기세는 더욱 거세졌다(노태구, 2003, 128쪽). 일제는 이 시기 민을 향해 포를 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고종 12년(1875년)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보고’<sup>16)</sup>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이며, 한편으로 당시 관리들의 기강이 아주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위기의식을 느낀 민들은 산과 계곡으로 피난을 갔고, 어떤 곳은 고을 전체가 사방으로 도망갈 지경이었다. 또한, 외압에 의한 서울의 개방은 국내 상업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도시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항적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1887년 2월, 1889년 12월, 1890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철시(撤市)파업과 시위 투쟁이 그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철시투쟁을 통해 서울상인들은 외국상인들의 도성(都城)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을 개방한 외국과의 조약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들 수천 명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외아문(外衙門)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섭과정에서 봉건 정부의 사대주의정책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철시투쟁으로 상징된 1880년대 서울상인들의 상권수호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홍순권, 1994, 101~102쪽). 이처럼 민(民)을 중심으로 한 대항 공론장이 구축되고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산하지만,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불평등조약 체제를 수립하여 조선침략에 발판 마련에 성공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을 총칼로 제압하고, 정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 분과, 1989, 80쪽). 이러한 외세의 침입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지체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의 사회운동이 완성된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민들에게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면서 직접 행동으로 대응하게끔 만든 기제가 되었다.

#### 4. 규범적 차원에서 대항 공론장의 특성

민의 이데올로기는 민의 일상성에서 접근해야 알 수 있지만, 사실상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민이 스스로 말할 언로(言路)도 없고, 사료에서도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을 언급하는 사료는 민란이나 농민전쟁 혹은 민의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 등의 사회운동 등 비일상적인 세계가 전개될 때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시대와 사회의 전체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조경달, 2000, 5~6쪽). 즉, 당시의 민의 사상은 사회운동을 통해 전달 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조선후기 대항 공론장을 유지하게 하는 규범적 토대는 시위·투쟁이라는 사회운동을 통해 탐색해야 한다.

16) “방급 영종 첨사 이민덕(李敏德)의 보고 부분을 받아보니 저놈들의 배가 연기를 피우고 닳을 올린 후 앞바다로 내려오면서 연이어 대포를 쏘았습니다. 온 부대가 뒤죽박죽이 되고 불길이 온 성안을 휩쓸어 백성들의 집이 연이어 타면서 관청 건물까지 불길이 미쳤기 때문에 ‘전괘(殿檣)’를 모시고 군사들이 도성으로 퇴각하였는데 죽거나 부상당한 군사들의 수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첨사의 인장까지 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종실록』 고종12년(1875년) 8월 25일.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를 지탱하게 한 이데올로기는 민본사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부패한 관리와 무능한 정부, 외세의 침략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다. 특히 부패한 관리와 삼정문란으로 인해 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된다. 고종 25년 ‘좌의정 김병시가 왕에게 전언하는 말’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백성의 일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백성은 지금 곤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들뜬 거짓말이 한번 나돌면 민심이 쉽게 소란해집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침해하는데다가 또 궁지에 빠진 백성을 굶어 들여, 이 불쌍하고 곤궁에 처한 백성이 살아갈 수 없으니 민심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고종 실록』, 고종 25년(1888년) 8월 26일

이처럼, 민의 극심한 생활고와 불안으로, 유언(流言)이 난무하고, 민심이 점차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민의 경험은 새로운 사상을 꿈꾸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이는 초기 대항 공론장의 논의인 사회적 불평등과 생활의 불안에서 나타난 적대적 대항 운동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기든스(Giddens)이 언급한 일종의 ‘해방정치’에 해당된다. 당시 사회운동을 유지하게 하는 사상의 지향은 ‘향해서’가 아니라 ‘벗어나’이다(Giddens, 1991/ 2001, pp. 335~339). 이러한 대항 공론장은 크게 두 갈래의 사상적 토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반(半)봉건 사상과 반(反)외세 사상이 그것이다. 첫째, 반(半)봉건사상<sup>17)</sup>으로는 대동사상, 보국안민, 평등사상 등이 있다. 대동사상은 당시 결사체인 향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 향회를 통해 농민들은 자체조직을 확대하고 관리의 탐학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밑에서부터 해체되어가는 조선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안병욱, 2000, 163쪽).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회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신분차별과 계급 간의 불평등을 해결할 설명방식으로 나온 대동사상이다 이 대동의 논리를 통해 각 계층 간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체제 논리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민을 이념적으로 묶어 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안병욱, 2000, 69~70쪽). 한편, 보국안민과 평등사상은 동학운동을 통해 적극 발현하였다. 1862년 처음으로 시행된 전국적인 민의 봉기이자 종교 봉기인 동학<sup>18)</sup>운동에서는 그 목적이 선명하게 발현되었다. 『수록』<sup>19)</sup>의 무장 현에서 ‘동학인 포고문을 베껴 올린 글(茂長縣贖上東學人布告文)’에서는 당시 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17) 반(半)봉건 사상은 왕권에 대한 전면 부정이나, 당시 관료사회와 사회구조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당시의 민본사상 즉 ‘민을 위한 정치’로의 회귀의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때문에 보국안민 역시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적 안정의 요구이지, 왕권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18) 당시 종교단체의 ‘동학’은 프레이저(Fraser, 1989)가 말한 ‘철폐와 재편성의 공간’과 ‘선동활동을 위한 기지의 훈련원’이었다.

19) 『수록(隨錄)』은 무주 관아에서 중앙정부 및 전라도 각 지역의 관아와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아 엮은 것이다. 수록연대는 1894년 3월부터 1897년까지인데, 『동학혁명 국역총서』에는 1894년에 해당한 부분만을 번역해서 실었다. 주요 내용은 1894년 3월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발표한 포고문과 각 지역 수령의 보고문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라감사의 계초, 무주에 통고된 감결, 염찰사의 계초, 그리고 효유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동학 농민군의 동향과 각 지역 수령의 동정 및 대책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략>오늘날 신하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침하는 말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인 妖言’이라 하고 정치적인 사람을 일컬어 ‘비도 匪徒’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제1차 농민봉기의 목적은 폐정개혁에 의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실현이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왕권의 수호와 탐관의 응징이다. 특히 전봉준에 의한 폐정개혁 27개 조<sup>20)</sup> 요구는 민의 사회운동의 이념적 진전이며, 이를 운동으로 실현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상인의 침투와 그들에 의한 상행위, 보부상, 전운사의 폐해 등 이른바 독점적 특권 상인의 수탈에 대응하는 개혁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폐정개혁 요구에 나타난 민의 이념은 자신들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권력 문제에 확대된 것은 민의 사회운동 과정에서 획득된 성과라 할 수 있다(김혜승, 2005, 68~70쪽). 특히 고부 민란 이후 농민군은 봉건 정부와 화약<sup>21)</sup>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개혁조건<sup>22)</sup>을 제시하게 된다. 이 폐정개혁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 속에는 당시 민(民)의 생활에 깊숙이 내재하여 있는 이데올로기가 표출되어 있었다.

우선 제1조에서는, 민이 한편으로 봉건 정부를 승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정치에 참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머지 조항과 함께 봉건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반(半)봉건정신이 나타난다. 제2, 3, 4조의 요구는 간접적인 계급투쟁을 시사하고 있다. 제12조는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라는 요구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민의 군사적 우위가 유지되고 직·간접적으로 민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 20) 폐정 개혁 27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운사를 혁파할 것, 2) 국결을 가하지 말 것, 3) 보부상인의 폐해를 금단할 것 4) 도내 환전은 옛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므로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 상납전 각 포구 잠상의 쌀 매매를 금할 것, 6) 동포전은 매호(每戶) 춘추(春秋) 2냥씩 정할 것, 7) 탐관오리를 벌하여 축출할 것, 8) 위의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메관매직, 국권농락한 자는 모두 축출할 것, 9) 지방관이 경내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논을 사지 말도록 할 것, 10) 전세는 예전대로 할 것, 11) 잡역(雜役)을 줄일 것, 12) 포구 여역세를 혁파할 것, 13) 보세(漕稅) 및 궁방전을 혁파할 것, 14) 각읍 수령들이 민간소유 산지에 와서 늑표(勸標)하고 투장(偷葬 : 남의 무덤에 장사지냄)하지 말 것, 15) 균전어사를 개혁할 것, 16) 각읍 시정(市井)의 모든 물건에 분전수세(分錢收稅) 하는 것과 도상명색(都買名色)을 혁파할 것, 17) 백지징세를 말 것, 18) 국태공(대원군)에 국정을 맡겨 민심이 소망하는 바가 있게 할 것, 19) 진고는 혁파할 것, 20) 전보국은 민간에 폐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 읍 창고물종(物種)은 시가에 따라 취용(取用)하게 할 것, 22) 각 읍 이전에 일을 맡길 때는 청전(請錢)을 받지 말고 능력에 따라 쓸 것, 23) 각 읍 탐관오리로서 천 냥을 수탈한 자는 사형시키고 그 친족을 몰리지 말 것, 24) 사체가 여러 해 된 것을 관장(官長)을 끼고 강제로 받아내는 일을 일체 금할 것, 25) 동학인으로 허물없이 살육되고 구속된 자는 일일이 신원케 할 것, 26) 경영병우사(京營兵郵使)의 요미(料米)는 예전대로 감삭할 것, 27) 외국인은 개항장에서만 매매하여 도성에 들어와 시장을 차리거나 각처에 임의행상하지 말 것”이 그것이다.
- 21) 1894년 갑오농민전쟁 중 농민군과 정부가 맺은 휴전화약으로, 이 후 농민군의 차치기구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고, 폐정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
- 22) 1. 동학교도와 정부는 쌓인 원한을 씻고 서정(庶政)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하게 징벌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6. 갖가지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량강(平凉榜)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일본인과 내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11. 빛은 공적인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를 평균하여 나누어 분작(分作)한다.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봉건지배층의 수탈이 경감되고 일부는 폐지되는 조건에서 제12조에 나타난 농민들의 요구는 농민의 토지 소유이다(망원한국사연구소 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 분과, 1989, 124~125쪽).

또, 제5, 6, 7조와 9조는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해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평민들은 당시 삼정문란으로 인해 매관매직으로 신분을 사거나, 돈이 없는 민들은 조선 초기부터 경제적 곤궁으로, 가능한 한 근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조선 후기에 들어와 노비의 도망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것 역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로, 민(民)들은 신분개혁을 현실화하려고 하였다. 폐정개혁 12조의 제5, 6, 7조와 9조는 이러한 정신의 반영이다. 즉 천민의 대우개선이나 노비문서의 소각 등으로, 조선 사회의 최하위 계급인 천민의 해방을 요구한 것이다. 조선조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의 범위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과부의 재혼허가와 문벌타파 및 인재 중심의 관리등용 등 평등사상<sup>23)</sup>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지향이 뚜렷하다(김혜승, 2005, 72쪽).

또한, 농민군 내부적인 규약에서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동토비록』의 정탐기(偵探記)<sup>24)</sup>에는 동도대장이 각 부의 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늘 적을 상대할 때마다 우리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자가 공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절대로 목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늘 행군하며 지나갈 때에 절대로 사람과 가축을 해치지 말라. 효제와 충성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사는 마을의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마라”고 명하며, 군대를 훈계하는 12개조 호령(十二條戒軍號令)<sup>25)</sup>을 제시하고 있다. 이 12개조호령에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운동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를 고수하고, 민주적 운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당시 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운동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토대로 하고,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반봉건사상을 토대로, 대동사상, 보국안민, 평등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반(反)외세 사상이다. 반(反)외세 사상은 당시 조선사회와 서구와 다른 중첩적 구조에서 대항 공론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반(反)외세사상은 외래 자본주의 진출, 특히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순을 민족적 모순으로 승화시킨 것은 반침략사상이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척왜양(斥倭洋)’사상으로, 도시빈민, 상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척왜양사상은 일본 정부의 횡포와 일본 상인들의 국내 상인들의 산업기반을 빼앗아 간 일제에 항거하는 정신을 의미한다(홍순권, 1994, 123쪽). 이 반(反)외세 사상은 고부민란 이후 체결한 개혁조건 10조인 “일본인과 내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23) 이때의 평등사상은 푸코적 배제의 유무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阿部 潔, 2000). 제도적 측면에서 노비문서의 소각, 백정 등의 차별철폐, 합의에 의한 지배-종속 관계인 과부의 재혼 문제 등,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차별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4) 『동토비록』은 『동학혁명 국역총서』에 실린 것으로, 제1차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 대해서 전라도 각 지역으로부터 중앙 정부가 받은 전보문과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편집된 책이다. 무장포고문, 농민들의 통문, 12조의 훈령, 호남유생이 초토사에게 보낸 원정문 등 당시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동토비록』에 실린 12개조 호령은 다음과 같다. “행복하는 자는 아끼고 대우하고,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탐욕스러운 자는 내쫓고, 따르는 자는 공경하여 복종시킨다. 배고픈 자는 음식을 주고, 간특하고 교활한 사람은 그만두게 한다. 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반역하는 자는 잘 타이르고, 아픈 자는 역을 준다. 또한 불효자는 죽인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反)외세 사상은 농민군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자주 입었던 영세 상인이나 도시빈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76년 개항 이후 봉건 정부는 외국상인과 외국상품의 침투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해 외세에 빌붙는 사대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홍순권, 1994, 96쪽).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을 곤궁함을 절감했던 도시빈민과 영세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反)외세 사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도시상인들을 중심으로 대항 공론장이 형성하고, 1887년 2월, 1889년 12월, 1890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철시(撤市)파업과 시위투쟁을 통해 발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투쟁은 봉건 정부의 사대주의적 정책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실패하였다(홍순권, 1994, 101~102쪽) 그러나 이 반(反)외세 사상은 이후 항일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는 확실히 민본사상이 방기된 시대이다. 민본사상이 가지는 기본 이념인 백성을 위한, 백성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이념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民)들은 이 대항 공론장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내재한 이념들이 운동을 통해 발현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인 반(半)봉건·반(反)외세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 5. 분석적 차원에서 대항 공론장의 특성

대항 공론장의 구성요소<sup>26)</sup>를 토대로, 조선후기 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항 공론장의 주체, 주제, 공간, 커뮤니케이션방식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 1)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주체

19세기 반(半)봉건·반(反)외세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들은 도시빈민과 농민계층 등으로 대부분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대항 공론장에 참여한 계층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더는 참고 견딜 수 없어 집단항쟁에 나선 것이다(안병욱, 1994, 20~21쪽). 특히 농민들이 그들만의 대항 공론장이 형성하게 된 원인은 주로 부세문제와 수령·이서배들의 침학이었다. 이들은 봉건적 수탈에 대응하는 첫 단계로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지배층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놓고 지배층과 적극 맞서나갔다. 다음으로는 농민들이 이산(離散)과 도망의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중세 자원제도는 농민들의 도망과 이산 때문에 붕괴하였다. 이는 다시 농노제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계급투쟁이 되었다. 나아가 이런 개별적인 저항이나 투쟁은

26) <표 1> 대항 공론장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주체	근대적 합리성과 근대적 권위에서 배제된 사람들
주제	일상생활의 정치화, 사회적 불평등의 발현, 사회변혁 및 체제 변화
공간	일상 공간, 공적과 사적 영역의 매개하는 다원적이고 복수적 공간
커뮤니케이션 방식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회문제 제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인 담화나, 시위와 항쟁 등

\* 폭스(Fuchs, 2010), 프레이저(Fraser, 1992), 요시다(吉田, 2006) 등의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끝내 집단적인 저항운동 곧 민란이나 변란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 상호 간에 피지배 계급이라는 계급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체제변혁을 수행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안병욱, 1994, 19쪽). 특히 이들이 주체가 되는 동학을 통해, 더욱 결집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한 운동 공론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시 빈민의 항거는 농촌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세기 전반 서울의 빈민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민중봉기라는 극단적인 저항으로 몰아간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쌀이나 땀감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동향, 그리고 일상 속에서 도시민들이 접촉하게 되는 관리들의 침착 등이다. 도시에서 대항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관리들, 그 가운데서도 하급관리들의 도시민에 대한 침학이다(한명기, 1992, 133~135쪽). 도시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 공론장의 특징은 대부분의 항쟁이 즉자적(卽自的)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직업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결성된 조직이 운동의 발생과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부분의 항쟁이 직업적인 유대관계로 결성된 이익집단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도시민의 대항 공론장은 도시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계층이 제기하지 못한 외세에 대한 반침략의 문제를 전면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백승철, 1992, 334~339쪽). 이 밖에도 도시 유민(流民)들과 기층민들이 주축이 된 명화적(明化賊)이 있다. 1862년을 전후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들은 민 씨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명화적은 점차 체계화되고 활동도 반관(反官)·반침략(反侵略)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이행기로 가면서, 명화적은 봉건세력에 대한 개별적 저항차원을 넘어, 일반 농민들과 연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갔다. 특히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을 표방하여 격문(檄文)을 전하는 등 반침략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다(백승철, 1992, 328~339쪽). 이처럼 당시 대항 운동의 주체는 당시 국가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농민, 상인, 유민(流民) 등이 주축이 된 민(民)들이라 할 수 있다.

## 2)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주제

조선 후기 대항공론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민(民)들의 생존권 침해이다. 이에 민들은 반봉건(半封建)·반외세(反外勢)를 중요한 이념으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변화 그리고 체제변혁을 위해 사회적 운동을 시행하였다.

당시 봉건모순은 토지제도의 개혁지향, 정치기강의 문란에 대한 비판, 사회신분의 철폐, 조세제도의 문란을 척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당시 농업생산양식의 변화는 소수 지주나 상인에게 토지와 부가 더욱 집중되고 많은 농민이 토지를 상실하였다. 조선 후기 농업경제의 변동 속에서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지주, 그리고 다수의 빈농으로 양극 분화해 갔던 것이다. 농민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다. 이처럼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19세기 후반 농민층을 양극화하였고, 이는 조선사회 전반을 동요시켰다. 또한, 18세기 삼정체제는 민(民)의 부담을 가중되고, 이는 곧 반(半)봉건 사상으로 나타났다(신순철·이진영, 1998, 10~12쪽). 한편, 정치적으로는 세도정치와 매관매직으로 말미암아 정치구조가 부패하여, 국가가 민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은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적 변화와 체제변혁을 꿈꾸게 되었다.

한편, 반(反)외세사상은 외국상인의 침투와 외국상인의 국내유통기구와 결탁을 배척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항이 전면화되는 시기에는 반(反)외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들이

본격화되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항적 공론장이 통합되는 양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순을 민족적 모순으로 승화시킨 것이 척왜양사상이다. 즉, 당시 민(民)을 중심으로 행해진 사회운동은 봉건체제의 해체에 맞물려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철폐와 체제개혁을,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는 척왜양 운동과 외세에 무력한 정부체제에 대한 변혁 요구였다.

### 3)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공간

대항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일상 공간이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매개하는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은 일상 공간이나 결사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농촌사회의 결사체인 향회와 두레, 민(民)들의 생활공간인 빨래터와 장시(場市) 등과 종교단체인 동학 등이 그것이다.

원래 향회는 사족 층들의 상호결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와 부세부납 방식이 공동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면리나 동에 분단되었던 부세를 분배하기 위해 민(民)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다. 향회가 부세행정에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변환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7, 5쪽). 조선후기 향회는 다수 이익, 나아가 민(民)의 공감 위에 활동하였다. 또한, 향회는 대동의식(大同意識)을 기반으로 각 계층 간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민을 이념적으로 동시에 묶어 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이고 조직인 활동이 가능한 장으로 변화되었다(안병욱, 2000, 60~70쪽). 이러한 향회의 변화는 사족지배체제를 동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民)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민결사체로 농업생산을 조직화하기 위해 생성된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가 있다. 이양법으로, 두레의 경제성장력은, 점차 독자적인 조직화의 길로 나아갔다. 두레 조직이 조선 후기 농민의 반봉건·반외세투쟁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런 점에서 두레는 농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표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했다(최우영, 2006, 269쪽). 이러한 점에서 두레는 순수하게 자작·소작 농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론장이다. 18세기 이후에는 민(民)을 중심으로 농촌사회를 조직화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민(民)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동학이다. 동학은 표면적으로 종교단체이지만, 그 근원에는 기존 봉건체제에 대한 봉기와 외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의 역할이 강하다. 동학은 당시 대내적으로 부패한 사회에 대한 저항과 대외적으로는 반외세 운동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철폐, 사회변화와 체제변혁을 시도하였다. 동학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은 민을 중심으로 한 시위운동의 치성과 갑오농민전쟁을 통한 집단 대항 사회운동 등이 있다(박영학, 1989, 238~239쪽). 이 밖에도 민(民)은 일상적인 공간인 빨래터나 장시를 통해 와언(訛言), 요언(妖言), 참요(讖謠) 등 구언을 통해 대항 공론장을 구축하였다.

### 4)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대항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담화나 시위나 항쟁 등이다. 조선후기 대항 공론장은 표현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말이나 구두에 의한 방식과 시위나 항쟁 등을 통한 운동에 의한 방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조선시대 말이나 구두에 의한 대표적인 저항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와언(訛言), 괘서(掛書), 참요(讖謠) 등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에 더욱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와언은 현실이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려고 일부러 퍼뜨린 유언비어적 성격이 강한 선동행위이다(홍순민, 1992a, 47쪽).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민(民)들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직접 대항할 수 없는 자신들의 불만이나 원망을 와언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더욱 늘어났다.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변형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으로 일으켰다(한명기, 1992, 113쪽). 괘서 역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역적 확대와 함께 참여계층의 다양화 현상 등으로, 대항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민의 저항의식과 비판의식이 점차 확대·성장해 감을 보여주고, 1862년 전국적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이상배, 1999, 291~305쪽). 또한, 당시 정부 역시 괘서를 두려워했다. 고종 21년의 ‘종각(鐘閣)의 괘서사건’<sup>27)</sup>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도 괘서에 대해 심하게 경계를 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대단했다. 또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유언(流言)은 정보의 확산은 물론 실천으로 발현되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그 내용은 민(民)들의 정치적 표현이 대부분이었다(김광옥, 1993, 5~7쪽).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항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참요가 있다. 참요는 피지배층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를 중심으로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참요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이슈를 다루는 특성상 사회의 여러 모순과 갈등의 요소를 담고 있다. 참요의 기능은 정치적 비판기능이 강하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폐쇄되었을 때 봉기를 예고하는 선전·선동과 정치비판의 역할을 했다(김광옥, 1993, 16~17쪽). 구체적으로 참요를 행위축구형과 여론수렴형이 나눌 수 있다. 행위축구형은 대항 공론장에서 선전·선동을 조장하거나 신념화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유언비어에 가깝다. 행위축구형의 힘은 일반 민요의 정치적 기능을 가진 노래들보다 훨씬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쟁 요건의 수단은 물론 참여구성원의 응집력을 보여준다. 특히 민란이나 혁명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급속한 전파력을 가져 집단을 결집하는 힘이 있다. 이 결집한 민심은 민주의 사회적 태도로 나타나고 역사의 전면에서 행동화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이창식, 2004, 114쪽).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사회비판적인 내용으로는 고종 조의 <나비 참요><sup>28)</sup>와 선전·선동과 참여를 고취하는 대표적인 참요로는 <가보세요><sup>29)</sup> 당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고통과 열망을 노래한 <새야 새야>, <개남요(開南謠)>, <봉준요(奉準謠)> 등이 있다(정일권, 2010; 이창식, 2004, 108쪽). 한편 여론수렴형은 신념을 위한 민요이다. 여기에는 민의 삶에 대한 소박한 열망, 대등한 사회의 열망, 신분제도 개혁 등 경험적

27) “지금 듣건대 일전에 종각(鐘閣)에 괘서(掛書)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포도청(捕盜廳)에서 만일 착실하게 살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하는 것을 볼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니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이봉의(李鳳儀)와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한규직(韓圭稷)을 다 같이 벼슬에서 파면시키는 동시에 말은 동리(洞里)를 잘 살피지 못한 해당 포도부장(捕盜部將)을 해당 포도청(捕盜廳)을 시켜 사실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실록』 고종21년(1884년), 3월 12일.

28) <나비 참요>는 “사대문 걸고/나비잠만 잔다”라는 요로, 고종조의 쇠국정치를 비판하는 풍자요이다. 비판요는 참요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의 특징이며, 기능이기도 하다.

29) <가보세요>는 “가보세 가보세 울미적 울미적/병신되면 못간다”라는 요이다. 갑오(1893년)에 시작하여 울미, 병신(丙申)에 끝난 농민운동을 동음이의어로 그려낸 세태풍자이며, 갑오농민운동에 대한 선전적 기능이 있는 참요이다.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이창식, 2004, 114~118쪽). 당시 참요의 유행은 당시 민들 간의 감정공유를 이끌어냈고, 감성적으로 규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행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피지배층의 인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의를 끌어냈다(정일권, 2010, 90쪽).

두 번째, 시위나 항쟁 등을 통한 운동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는 항조운동, 작계, 민란, 변란 등이다. 초기 민(民)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단순히 적의를 드러내는 행동에서 점차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발전해 나갔다(조성윤, 1994, 153쪽). 조선 후기 삼정문란에 대한 민들의 소극적인 사회운동은 항조운동(抗租運動)<sup>30)</sup>이었다. 항조는 사실상 거대한 봉기로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민(民)은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에 맞서 점차 조직 역량을 키워갔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정소(呈訴) 등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관철코자 했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석규, 1992, 23~25쪽). 그 때문에 민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적극 항거의지를 표현하고자 그들 나름의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작계<sup>31)</sup>는 저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항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일회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특징인 대항 공론장이라 할 수 있다(홍순민, 1992a, 46쪽). 조선 후기 이러한 대표적인 조직이 명화적(明火賊)이었다. 1862년을 전후로 하여 활발해지기 시작한 명화적의 활동은 민 씨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명화적은 삼정문란으로 인해 유민(流民)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주요 공격대상은 토호나 지주 등의 부민가와 권력과 결탁한 대상인 그리고 중앙으로 보내지던 조세 등의 상납전이었다. 나아가서는 관아를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교졸(校卒)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배항섭, 1991, 340쪽). 근대이행기로 가면서, 명화적은 봉건세력에 대한 개별적 저항차원을 넘어, 일반 농민들과 연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갔다(백승철, 1992, 328~339쪽).

한편, 민란은 일상을 넘는 행위이며, 민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한번 일어난 민란은 민이 직접 자율성을 갖고 투쟁을 밀고 나간다. 또한, 저항의 형식은 점차 축제화 되면서도, 민이 직접 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조경달, 2007, 49~50쪽). 이들이 민란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현실적 고통의 개선이었다(한명기, 1992, 127쪽). 이들은 민란을 통해 쌓인 분노와 원통함을 이서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분노로 표현하였다(안병욱, 2000, 147쪽). 민란에서 한층 체계화되고 조직화한 것은 변란(變亂)이다. 변란은 권력투쟁을 위한 일종의 정치투쟁이다. 변란은 체제 저항적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 주도하고, 혈연이나 친분 등과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성훈, 2000, 18쪽). 변란은 조직과 이념, 그리고 투쟁목표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민란과 확연히 구별된다. 1894년 농민전쟁 단계에서 획득되는 일부의 요소를 외형적으로 이미 갖추고 있었다. 특히 변란에서는 이미 1860년대 말부터 반외세 문제가 제기하고 있다. 이는 1876년 이후가 되면 변혁운동에도 반봉건에 더하여 반외세를 동시에 함축하는 논리가 요구되었다(배

30) 타조법(打租法 : 소작료의 액수를 정하지 않고 분배율(分配率)만 정했다가 생산물을 놓고 분배율에 따라 나누는 소작의 관행)의 관행, 고율소작료(高率小作料)의 징수, 지세(地稅), 기타 종자세를 소작인에게 징수하는 것, 부실한 지주의 경영 등에 대항하기 위한 소작인들의 저항운동이다(황선희, 1984, 224~225쪽).

31) 착취를 당하는 노비나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인 도적이 되어 저항하는 집단을 작계라 한다. 이들 집단은 왕실과 각급 국가기관, 감사와 수령 등 지방관과 그 지방관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향리, 아전 등 지방관리, 지방의 유력인사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도적활동은 조선시대 농민저항의 한 형태이며, 한때 농민저항의 주류가 되기도 했다(홍순민, 1992b, 340~342쪽).

항섭, 1992, 261쪽). 19세기 후반의 변란은 주도층의 지역적 구성범위가 넓어졌고 같은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도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대항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며, 당시 민(民)의 저항의식을 이어가게 해주었다.

## 6. 결론

조선 후기 공론장은 봉건적 흔적과 초기 근대 이행기에서 볼 수 있는 공론장의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이 서구와 달리 새로운 생산력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는 부농, 도시 부르주아지나 중소상공업자, 상인·고리대자본은 봉건지배계급과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비호 아래 그들과 결탁하여 오로지 민(民)만을 착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배항섭, 2008, 360쪽). 그래서 조선 후기 공론장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기존의 전통적 공론장은 주류 공론장인 봉건공론장의 역할을 이행했지만, 기층민이 중심으로 한 민(民)들이 형성한 공론장은 반(半)봉건·반(反)외세적인 성격을 가진 하부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근대 초기 공론장과 조선 후기의 대항 공론장이 공권력을 비판한다는 측면은 유사하나, 행위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구별된다. 즉 서구의 부르주아 공론장이 토론을 위주로 성장했다면, 조선 후기의 부르주아 공론장은 봉건을 답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대신 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항 공론장에서는 시위나 운동 등의 행위를 통해 저항의식이 성장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의 공론장 중 대항 공론장은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 극복하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 반(半)봉건·반(反)외세적 성향이 있는 생동적인 공론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민을 중심으로 한 대항 공론장은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천적 행위로 나타내던 공간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 즉 역사적 차원, 규범적 차원, 분석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특성		
역사적 차원	규범적 차원	분석적 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대내적 상황</b> : 농업의 근대화, 한글의 대중화, 민의 교육기회 증대, 민의 커뮤니케이션육구증대, 세도정치, 매관매직, 삼정문란, 신분제붕괴, 양극화현상.</li> <li><b>대외적 상황</b> : 외세침략의 강화, 외세의 시장개입과 불법적 상업행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전통적 민본사상의 붕괴</b></li> <li><b>민(民)의 이데올로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半)봉건 : 대동사상, 평등사상 보국안민</li> <li>반(反)외세 : 척왜양사상</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주체</b> : 농민층, 도시빈민, 상인, 천민 등</li> <li><b>주제</b> : 사회적 불평등 철폐, 체제 개혁 등</li> <li><b>공간</b> : 동학, 향회, 두레, 장시, 일상 공간 등</li> <li><b>커뮤니케이션방식</b> : 패서, 요언, 참요, 와언, 시위와 항쟁 등</li> </ol>

역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항 공론장의 개념적인 역사는 1960년대 서구의 후기자본주의와 신사회 운동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근대 형성기에 서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적 현상이 존재했다. 그러나 당시 부르주아 공론장을 새로운 사회적 전개가 우위에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그 세력이 미력한 대항 공론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을 계기로 대항 공론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넥트와 크루게의 프롤레타리아 공론장, 프레이저의 복수적 공론장 등 다양한 대항 공론장의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이론적 틀을 준거로 한 다양한 운동들이 행해졌다. 이때 운동의 목적은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된 계층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이다(박춘서, 2006, 58~65쪽). 초기 대항 공론장의 이론적 논의는 적대적 저항운동에서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질의 문제로 진전되었다(藤田香久子, 2005, 9쪽).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논의는 적대적 대항 운동에 가깝다. 그중에서도 계급적 관점의 이론적 체제와 유사하다. 즉 당시 민(民)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된 문제인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이는 당시 형성된 부르주아계층의 그 역할이 미비하고, 오히려 봉건세력과 결탁해 민(民)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으며, 게다가 외세의 침입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항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여기서 서구의 대항 공론장과 구별되는 점은 조선 후기 민(民)들은 봉건체제에 의한 억압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외세에 의해 침탈과 침입 등 중첩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또 서구의 공론장의 역사적 전개와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 사회적으로 무방비상태에 놓인 기층민들 즉 민(民)들은 국내외적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반(半)봉건·반(反)외세 사상을 내세워 자신들을 방어하고자 했다. 서구의 대항 공론장의 이념과 달리, 이중적인 고통을 시달린 조선 후기의 민(民)들은 대외적으로는 반(反)외세사상인 척왜양사상을 앞세우고, 대내적으로는 반(半)봉건사상인 보국안민, 대동사상과 평등사상 등을 내세웠다. 즉, 반(反)외세사상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온 사상이며, 반(半)봉건사상 중 대동사상과 평등사상은 생활 속에서 그들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근대적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 보국안민 사상은 사회불안과 국가체제의 위기로부터 스스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생성된 이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사회구조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준 일레와 달리, 한국 나름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항 공론장의 주체는 근대의 합리성과 권위로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주체 역시 정치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농민층, 도시빈민, 상인, 천민 등이다. 대항 공론장의 주체는 일상의 정치화, 사회적 불평등의 발현, 사회변화 및 체제변화 등이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주체 역시 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변화 및 체제변혁 등이다. 한편, 대항 공론장이 형성되는 공간은 일상공간, 공적과 사적 영역을 매개하는 대안 미디어 등과 같은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의 공간은 일상공간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시 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한 탓에 주로 향회나 두레 같은 결사체나, 종교단체인 동학 그리고 일상의 공간인 빨래터나 장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대항 공론장은 일상적인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의 담화나 시위와 항쟁을 통해 행하였다.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 역시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껴서나 요언, 참요, 와언 등과 같은 구어나 민란과 변란 등과 같은 시위나 항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은 기층민을 중심으로 한 민(民)들의 소통의 공간인 동시에 항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대항 공론장은 지속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당시 국가기강의 문란과 외세의 극심한 침략전략으로 인해 조선 사회가 식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대항 공론장은 조직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항일운동의 발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민중운동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Ⅰ 참고문헌

- 강상현 (2000).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제14권 1호, 7~40.
- 고동환 (1996). 조선후기 교통 발달과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제8호, 1~18.
- 고석규 (1992). 18·19세기 농민항쟁의 추이. 한국역사연구회 (편), 『1894년 농민전쟁연구 2』(9~30쪽). 서울: 역사비평사.
- 고성훈 (2000). 『민란의 시대: 조선시대의 민란과 변란들』. 서울: 가람기획.
-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34 : 조선후기의 사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사 36 : 조선후기의 민중사회의 성장』,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김광옥 (1993). 조선조 대항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참요(讖諭考).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1~25쪽). 서울: 한국언론학회.
- 김민남 (1990). 한국 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에 관한 연구 : <두레>와 <동계>(洞祭)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25호, 279~289.
- 김성국 · 서관모 (1986). 한국사회구성의 성격: 한국자본주의론의 일고. 『한국사회학』, 제20집, 19~35.
- 김용곤 (2000). 전국을 휩쓴 민란의 열풍-임술민란. 고성훈 외 (공저), 『민란의 시대』(179~220쪽). 서울: 가람기획.
- 김용직 (2006).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과 공론형성연구 :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335~357.
- 김윤희 (2009).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형성(1876~1894): 民=赤子와 『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제21호, 295~331.
- 김은규 (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2호, 255~282.
- 김은규 (2006).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33호, 87~114.
- 김혜승 (2005, 봄). 동학정치사상과 갑오동학농민전쟁 : 한국민족주의의 민중화. 『정치사상연구』, 제11권 1호, 61~77.
- 노태구 (2003). 전봉준의 동학 혁명 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1호, 109~143.
- 도면희 (1993). 근대=자본주의사회기점으로서 갑오개혁. 『역사와 현실』, 제9권, 163~178.
-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서술분과(편) (1989).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서울: 돌베개.
- 류원동 (1989). 경제사관의 현대적 조명. 이산 조기준박사 고회기념 논문간행회 (편),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50~61쪽). 서울: 대왕사.
- 민인철 · 이동근 (2005).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소고. 『언론과학연구』, 제5권 9호, 155~190.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117~155.

- 박선희 (2002). 대안언론으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운영, 뉴스생산, 뉴스 메시지 측면에서. 『언론과학 연구』, 제2권 3호, 153~184.
- 박영학 (1990). 『동학운동의 공시구조』. 서울: 나남.
- 박춘서 (1999). 대항 공론영역과 대안언론. 『언론연구』, 제3집, 233~263.
- 박춘서 (2000). 시민운동과 대안언론; 한국적 대안언론유형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44권 3호, 190~221.
- 박춘서 (2003).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주민발의단체의 언론매체인 대안신문의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3권 2호, 181~218.
- 박춘서 (2005).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 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시민단체의 인터넷 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3호, 227~272.
- 박춘서 (2006). 『대항공론과 대안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배항섭 (1991). 부호와 도적의 사회사 조선후기 삼정문란과 명화적. 『역사비평』, 통권17호, 338~344.
- 배항섭 (1992).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한국연사연구회 (편), 『1894년 농민전쟁연구 2』(259~302쪽). 서울: 역사비평사.
- 배항섭 (2008). 조선 후기 민중운동 연구의 몇 가지 질문 - 입술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19호, 207~241.
- 배항섭 (2009). 근대를 상대화하는 방법. 『역사비평』, 통권 88호, 358~380.
- 배항섭 (2010). 19세기 지배질서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용 - 仁政 願望의 형방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제39호, 109~158.
- 백승철 (1992). 개항 이후(1876-1893) 농민항쟁의 전개와 지향. 한국역사연구회 (편), 『1894년 농민전쟁연구 2』(303~340쪽). 서울: 역사비평사.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 (2010).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서울: 중원출판사.
- 신순철 · 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울: 서경문화사.
- 신용하 (1975). 『독립신문』의 창간과 그 계몽적 역할. 『韓國史論』, 제2호, 313~385.
- 안병욱 (1994). 전근대 민중운동의 논리와 이념. 『역사비평』, 통권26권, 17~23.
- 안병욱 (2000). 『19세기 향회와 민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묘섭 (1987). 『조선후기 보부상 집단의 사회적 기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숙경 · 윤영태 (2012). 대항 공론장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24호, 37~80.
- 유용민 · 김성혜 · 심영섭(2011). 블로그와 글로벌 공론장: ‘그리스 위기’담론에서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한계.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2호, 5~52.
- 윤영태 (2005). 시민미디어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308~341.
- 윤영태 (2009, 겨울). 대항공론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15호, 239~275.
- 이동수 (2006). 《독립신문》과 공론장. 『정신문화연구』, 제29권, 3~28.
- 이상길 (2006). 미디어와 공론장.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280~317쪽). 서울: 한울.
- 이상배 (1999). 『조선후기 정치와 패서』. 서울: 국학자료원.
- 이영훈 (1989). 조선봉건론의 비판적 검토 이산 조기준박사 고회기념 논문간행회 (편),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122~153쪽). 서울: 대왕사.
- 이윤상 (1993). 한국 근대사에서 개항의 역사적 위치. 『역사와 현실』, 제9권, 147~162.
- 이창식 (2004). 민요의 정치시학. 『비교민속학』, 제26집, 101~127.
- 이황직 (2009). 근대 한국의 초기 공론장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협성회와 토론회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32호, 63~91.

- 임동욱 (1999). 헤게모니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미디어.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3호, 121~155.
- 장명학 (2004). 《독립신문》과 근대적 정치권력의 등장. 『역사와 사회』, 제33집, 111~129.
- 장명학 (2007).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6권 2호, 27~54.
- 장승구 (2000).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김형효 외 5인 (공저), 『민본주의를 넘어서』(197~246쪽). 서울: 청계.
- 장시원 (1989).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적용. 이산 조기준박사 고회기념 논문간행회 (편),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263~302쪽). 서울: 대왕사.
- 장우영 (2005). 온라인 저널리즘의 정치적 동학 - ‘논객 사이트’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3권 2호, 157~188.
- 장호순 (2001). 언론개혁과 대안언론. 『녹색평론』, 제57호, 2~17.
- 정일권 (2010).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와 동학운동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4권 6호, 81~102.
- 정진상 (1994).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과 지향. 『역사비평』, 통권26호, 67~78.
- 조경달 (2007). 갑오농민전쟁과 유토피아. 『내일을 여는 역사』, 제29호, 40~52.
- 조성운 (1994). 임오군란. 강민길 등(편). 『한국사12-근대민족의 형성Ⅱ』(131~154쪽). 서울: 한길사.
- 조희연 (2011).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조희연·김동춘·김정훈 (편),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25~137쪽). 서울: 한울.
- 주중환 (1988). 『韓國資本主義史論』. 서울: 한울.
- 최단옥 (1983). 한국자본주의 초기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중산적 생산층. 『수선논집』, 제8집, 577~591.
- 최용호·엄창욱 (1995).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와 연속.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143~169.
- 최우영 (2006).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사회의 농민조직-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1호, 239~274.
- 최진덕 (2000). 유학의 민본사상, 그 이상과 현실. 김형효 외 5인 (공저), 『민본주의를 넘어서』(125~195쪽). 서울: 청계.
- 최형익 (2004). 한국에서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 구한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정신문화연구』, 제3호, 183~209.
- 한명기 (1992). 19세기 전반 반봉건 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 한국역사연구회 (편), 『1894년 농민항쟁연구 2』(109~140쪽). 서울: 역사비평사.
- 한선·이오현 (2008). 한·미 공동체 라디오 비교연구: 하위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제16권 4호, 79~114.
- 홍성구 (2001). 속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제9권 4호, 173~208.
- 홍순권 (1994). 상권수호와 식산흥업운동. 강민길 외 11인 (편), 『한국사 12: 근대민족의 형성 2』(95~127쪽). 서울: 한길사.
- 홍순민 (1992a). 17세기 말 18세기초 농민저항의 양상. 한국역사연구회 (편), 『1894년 농민정쟁연구 2』(31~65쪽). 서울: 역사비평사.
- 홍순민 (1992b). 장길산의 ‘전설’과 ‘사실’에 대한 변증. 『역사비평』, 제17권, 335~342.
- 황묘희 (2007). 동학의 근대성에 대한 고찰. 『민족사상』, 창간호, 227~245.
- 황선희 (1984). 구한말 농민분쟁의 배경연구. 『상명대학교 논집』, 제14권, 221~244.
- 阿部 潔(아베 키요시) (2000). 『公共圏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東京: ミネルウア書房.

- 吉田 俊(요시다 준) (2006). 『インターネット空間の社會學』. 東京: 世界思想社.
- 北郷裕實(키다고우 히로미) (2006). 對抗的公共圏の再正義の試み—オルターネティブな公共空間に向けて—. *International Media and Communication Journal*, No.4, 111~125.
- 木原滋哉(키하라 시게야) (2007). 對抗的公共圏のポリティクス. 『法政研究』, 第74冊 3号, 178~193.
- 藤田香久子(후쿠타 카쿠코) (2005). ツニアネット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空間. *International Media and Communication Journal*, No. 3, 5~25.
- Arnowitz, S. (2000). Unions as Counter-public spheres. In Hill, M. & Montag, W.(Eds.), *Masses, Classes, and the Public Sphere*(pp. 83~131). London: Verso.
- Cohen, J.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 Fraser, N. (1989). *Unruly Practices: Power, discourse and gen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Polity Press.
- Fraser, N. (1992).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Calhoun, C.(ed.), *Habermas and public sphere* (pp. 109-142). Cambridge: MIT.
- Fuchs, C. (2010). Alternative Media as Critical Media.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 13 No. 2, 173~192.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역(2001),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새물결.
- Negt, O. & Kluge, A. (1993). *Public sphere and experience: toward an analysis of the bourgeois and proletarian public sphere*. Minneapolis: Minnesota Press.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김세은 역(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Triadafilopoulos, Triadafilos (1999). Politics, speech, and the art of persuasion; toward an Aristotelian conception of the public spher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3, 741-757.

<1차 문헌>

- 『고종실록』, 『정조실록』, 『태조실록』 In 『조선왕조실록』.
- 『동토비록』, 『수록』 In 동학농민 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 위원회 (편). (2008), 『동학혁명 국역총서』 1-10권. 서울: 신생커뮤니케이션.

(투고일자: 2012. 5. 31, 수정일자: 2012. 7. 9, 게재확정일자: 2012. 7. 16)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 Public Sphere during the Early Modern Era in Korea

Suk-Kyoung Won\* · Young-Tae Yoon\*\*

The author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 public sphere during the late Chosun era based on three dimensions: historical, ideological, and analytical. The counter public sphere during the late Chosun era was a lively communicative sphere where the common people, who resisted the premodern ideas and foreign power, tried to overcome the oppress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lthough the counter public sphere did not continue to grow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it provided a basi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ideological ground for the democratic movement today.

Keywords: Public sphere, Counter public sphere, Late Chosun era, Early modern era

---

\* Lecturer, Dept. of Media Studies, Dong-Eui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Media Studies, Dong-Eui University